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회자되고 있다. 소유하지 않고 빌리고 나눠 쓰는 사회·경제 모델로서 현대인의 생활 트렌드에 맞춰 사회 모든 영역에서 소유보다는 공유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경험한 우리나라의 공유는 80년대 '야비바다' (야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운동과, 공동구매와 같은 형태의 사회 운동인데 지금에 와서는 공유 뒤에 경제가 붙으면서 새로운 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소유가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현재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는 뜻으

공유를 통한 지역(공동체) 재생

로 많이 쓰인다. 공유경제가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당시 저성장 경제 환경과 높은 실업률이 실질 가계 소득을 저하시켰고 이는 적정하게 소비하는 합리적 소비 패턴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IT 기술의 발달이다. 이는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개인을 IT 플랫폼인 SNS를 중심으로 연결하여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고, 지역사회에서만 이루어지던 공유경제 개념이 일상생활로 확산되는데 기여하였다. 이는 공유경제의 개념이 비즈니스로 성장 가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상품/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 매칭의 질 개선과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지역 기반 자원 공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 문제 개선, 공동체 의식 제고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직업 안정성 저해 등 부정적 면도 없지 않았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숙박, 차량 공유 서비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자인 숙박과 택시업계와의 경쟁이 부각되며 사회적 갈등이 증대하는 등 부정적인 영

향도 우려된다.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의 공유 비즈니스에서는 기존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갈등 발생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치 중심의 공유 비즈니스는 공동체에 필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자를 모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비즈니스가 보지 못했던 틈새시장과 유휴자산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 예로서 공유부엌(주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광주 동구 푸른마을 공동체센터의 공유부엌이 시설과 물품 준비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 개인이 일정 부분 이용 요금을 내고 공유부엌에서 스스로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센터가 운영하는 요리 교실에도 참가할 수 있다.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면서 나눔과 소통의 장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한다.

서구는 양동새마을사업 지역 내 공유부엌 프로젝트 양동기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양동시장의 다양하고 신선한 재료 구입이 쉽고 상업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용자는 지역의 청년과 다문화가족,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 독특하고 흥미로운 사업 프로그램을 접목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양동손맛 요리교실, 어진다방 커피학당, 바리스타 교육, 전통주 제조 교육 등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늘 '식사하셨습니까?' 밥 한번 같이 먹자'와 같은 정다운 인사들을 주고 받고 있다. 서로 관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우리의 독특한 문화이다.

음식을 같이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 1인 가구로 살면서 겪은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싶은 사람, 동네에서 친구를 만들고 싶은 사람, 혼자 밥 먹기 싫은 사람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 부엌에서 만난다. 모임이 계속되면서 단순히 음식이나 식재료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나아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

이렇듯 공유부엌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가 재생 또는 생성되고 또 청년과 노인 그리고 소외된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탬 수 있다면 바람직한 도시 재생을 위한 지역경제 공유모델이 될 것이다. 광주 도시의 재생 사업 이념들이 공유부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실험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재생 프로그램들이 도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고

광주에 아파트 언제까지 지을 것인가?



양성관 동강대학교 교수

데 왜 이렇게, 특히 광주에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을까? 광주에 아파트, 이대로 계속 지어도 괜찮을까? 어떻게 하면 광주의 아파트 건설의 열기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를 속히 실시해야 한다. 2019년 상반기 광주시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1492만원으로 작년 하반기 평균 분양가격 1055만원보다 41.4% 올랐다. 아파트 경기가 활발한 11개 광역자치단체의 분양 아파트 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 6.59%보다 훨씬 높고, 서울(21.8%)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다. 2019년 상반기에 분양된 화정동의 어느 아파트는 3.3㎡당 평균 1632만 원이었고, 농성동의 어느 아파트는 평균 2367만 원, 봉선동의 어느 아파트는 2375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을 견인해 광주 지역 시민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양가 상승으로 건설업체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광주에 하루 속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서 아

파트 분양 가격을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아파트 전매 금지 기간을 늘려야 한다. 현재 전매 금지 기간은 지역과 아파트 형태에 따라 금지 기간 없이 곧바로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를 비롯하여, 금지 기간이 6개월, 2년, 3년, 4년, 5년 등 다양하다. 보통 분양 공청 기간이 3년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입주 전에 전매가 가능한 현재의 법이 아파트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분양 당첨 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세가 적기 때문에 전매가 쉽게 이루어진다면 아파트가 복권 추첨과 다를 바 무엇이었는가? 아파트는 당첨자가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하고, 입주 후 적어도 3~5년은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매매 시에는 세금 차등 제도를 도입하여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1가구 2주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서두에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었다고 제시한 바 있다. 1가구 1주택이 원칙이나, 현대 사회는 자녀의 교육이나 부모의 봉양 등으로 인해 1가구에 2주택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주거 이외의 목

적으로 수십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 가격 인상이 매매 시 세금보다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최고의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7월에 광주시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3988가구로, 서울(5038가구)과 경기(1만 5989가구) 다음인 전국 3위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았다고 한다. 금년 하반기 역시 우산 구역 재개발 등 10여 지역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 광주는 아파트가 포화상태에 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의 아파트 열기의 대부분이 투기꾼과 부동산업자의 장난이라면, 투기꾼이 사라진 후 물거품이 된 아파트 가격 하락은 고스란히 광주시민의 빚으로 받게 될지도 모른다. 1가구 3주택 이상인 자가 아파트를 매매하게 될 경우 높은 세금을 물려야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 될 것이다.

하루 빨리 광주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여 아파트 분양 가격을 현실화시키고,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막고, 1가구 2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1인 다주택 소유를 막아 서민도 집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광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고

호남 민심 어디로



박안수 경제학박사

민생과 정체성, 그리고 정치 이념과는 상관없이 오직 내년 총선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합종연횡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많이 혼란스럽고 다소 실망할 수 있다는 염려도 든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정당의 수명은 고작 평균 3년 정도다.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지속했던 정당은 과거 유신 시대의 민주공화당으로, 17년 정도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는 쉽게 만들고, 금세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얼마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기리는 행사들이 열렸다. 행사 이후 'DJ정신'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DJ정신은 아마도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남북 평화와 화합 등 실사구시로 요약될 듯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DJ정신을 이어가고자 하였다. 특히 호남 정치인들은 여러 당으로 분열된 상황에서도 모두가 DJ정신을 잇는 정통 정당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일반 국

민들은 쉽게 동의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3권 분립이 확실한 우리나라에서 입법 기관인 국회의 주된 임무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고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며, 국가의 재정과 인사가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독·감사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20대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의와 몇몇 의원들의 광복회 만한 법안 발의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원들은 이렇다 할 성과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품격 없는 막발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다.

며칠 전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 28석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 호남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권자수가 적어 지역구 감소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 정치는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으며, 요즘은 진보와 보수를 구별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과거에 '바보'라고 할 정도로 무모하게 서울에서, 다시 부산 지역 총선에서 입후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대구의 K의원처럼 우리 호남에서도 소신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후보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정치인은 언제나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파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우리 호남의 민심은 예상을 뒤엎는 전략적이고 현명한 판단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을 다져 왔음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내년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선택의 폭과 변수는 상존한다. 하지만 지난날에 늘 그리해 왔던 것처럼 21대 총선에서도 호남의 유권자들은 견제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고도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연출하리라 확신한다.

社說

추석 민심 “소모적 정쟁 접고 민생 전념하라”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민심은 두 동강이 났고 정치권도 여전히 대결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추석 인사에서 “보름달이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평한 나라’에 대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추석 민심은 들로 갈라져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추석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이른바 ‘조국 정국’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모처럼 추석 밥상머리에서 가족들 간의 대화도 조국 장관 임명과 이에 따른 국민 분열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의 추석 민심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은 오히려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정국’에 대해 많은 국민이 극도의 피로감을 나타냈고 일하는 국회를 통해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심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회

가 민생을 돌보길 희망했다”며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제 할 일을 해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폭발’ 수준이었다고 전하면서 정권 비판을 계속했다. 한국당은 이어서 전국 모든 지역의 추석 민심이 ‘조국 임명’에 부정적이었다며 자진 사퇴나 임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그러나 이 같은 여야 대립이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라 단지 정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은 조국 정국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칠 줄 모르는 여야의 정쟁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의 본질은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다. 전 국민이 바라는 것은 소모적 정쟁을 접고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여야 공히 추석 민심을 받아들여 이제는 민생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바다 불청객 적조 피해 최소화해 총력을

양식장이 밀집한 전남 해역에 적조 경보가 내려져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태풍 ‘링링’이 지나간 뒤 바다 수온이 상승하고 일조량이 늘어 유해성 적조 생물이 확산하면서 어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0일 여수시 화정면 개도~경남 통영시 한산면 해역에, 12일에는 득량만 안쪽인 장흥군 회진면~관산읍에 각각 적조 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완도군 신지면~여수시 화정면 개도와 경남 통영시 한산면~거제시 일운면 해역 등 두 곳에는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해당 시군은 추석 연휴에도 적조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황토를 살포하는 등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행히 전남 해역에서는 아직까지 적조로 인한 양식장 어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근 경남 통영과 남해에서는 어제까지 양식장 일곱 곳에서 우럭과 납치, 도미 등 돌고기 188만 마리가 폐사해 30억 원 가까운 피해가 났다고 한다.

전남 해역 역시 고수온 속에 적조피가 이동과 확산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에서도 지난 2015년에 188억 원, 2016년에는 347억 원의 적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양식 어가에서는 먹이 공급 조절과 원활한 산소 공급 등 예방 조치를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수산당국 역시 적극적인 예방 및 방제 활동으로 올해를 적조 피해가 없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여승은 합창하고 절을 했다/ (중략)/ 쓸쓸한 낮이 옛날 같이 높았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정관/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아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다...”

백석(1912~?)의 시 가운데 ‘여승’이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일제강점기 어느 가족의 삶을 소재로 당대 민족의 아픔을 정치하게 그렸다. 여승이 되기 전 여인에게는 남편과 딸이 있었던 모양이다. 한때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

임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좌절하고 희망을 잃고 분노가 끓어오르며 잠을 못 이루는데 나라도 그 분노를 대신 표출해 주자”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박지원은 원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3대 소는 의원직 사퇴, 삭발, 단식”이라며 평가절하 했다.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기에 삭발을 하는 그 행위에 의견 표명을 하든 뭐라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

삭발

난 2017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급식노동자들과 파업에 대해 “그냥 밥하는 동네 아줌마들

이다. 별 게 아니다.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나”라고 말해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 그 가운데서 의원이 ‘아줌마’라고 비하한 여성 노동자들 가운데는 혼자 생계를 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시대는 다름지언정 시 ‘여승’의 주인공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언행을 했다면 삭발은 ‘쇼’로 비쳐지 않을 터다. 이 의원의 삭발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당)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경 영 지 원국 220-051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문 화 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경 처 부 220-0632	여 론 채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납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